

## 2022년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회차 결과 보고

|     |  |
|-----|--|
| 일 시 | 2022년 4월 29일(금) 13:30 ~ 17:00                    |
| 장 소 | 홍성군 오누이센터(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남동로 473번길 79-22)           |
| 참석자 | 총 55명(좌장 1, 발표자 2, 지정토론자 3, 광역센터 5, 그 외 참석자 44명) |
| 주 제 | “마을만들기 행정정보조사사업,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               |

### □ 주요 일정

| 구분 | 내 용   |
|----|---|
| 1부 | 발표 “새롭고 혁신적인 마을사업을 제안하다.”<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남 민선8기 농촌마을정책의 방향과 새로운 행정사업</li> <li>• 마을만들기의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행정사업 방식 제안</li> <li>• 충남 민선8기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제안 의견 취합 결과 공유</li> </ul> |
| 2부 | 쟁점토론 “민선8기의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어떻게 갈 것인가?”<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사업 관련 마을 리더, 행정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쟁점 토론 진행</li> </ul>  |

### □ 주요 내용

#### ○ 발표 “충남 민선8기 농촌마을정책의 방향과 새로운 행정사업”

##### - 구자인 소장(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 충남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이 잘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지원 센터와 행정 전담부서, 협의회와 법인 등은 타 시도에 비하면 성과가 크다고 생각됨. 이제는 상근자 90명을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행정 또한 상대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농촌협약 대응에도 굉장히 용이했음. 당사자 협의체가 생긴 것도 큰 성과지만 마을이장, 위원장님들의 희생과 봉사를 지나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만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신규사업’ 관련하여서는 행정 및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여러 가지 보고서, 마을독본 등에 사업 발굴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제시되어 있음. 문제는 사업은 제시되어 있는데 실행 주체는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함. 인력 대비 과제 수가 많다보니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마을’, ‘주민’, ‘마을만들기 관점의 전환’, ‘예산지원 방식의 전환’의 4가지는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숙제임. 첫 번째 ‘마을’은 단순히 행정리 지원사업으로 좁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움. 마을의 개념을 확장하는 관점이 필요함. 두 번째 ‘주민개념’은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뿐만 아니라 최근 이야기되는 관계인구를 포함하는 마을 주민 개념으로의 관점이 필요함. 세 번째 ‘마을만들기의 개념’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네 번째 ‘사업(예산) 지원 방식’은

공모라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사업을 분류하다보면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맞물려 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발표 “마을만들기의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행정사업 방식 제안”

#### - 서정민 센터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적지만 ‘직불금’이 도입 됨. 이후 정책의 흐름은 농업에서 농촌으로 전환됨. 흐름에 따라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중앙 사무 중 현장성이 강하고 지자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이양되기 시작함. 중앙정부의 예산 배부방식도 지방의 요청에 따라 상향식 경쟁으로 변경됨
- 1999년~2000년 사이 농업부문에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이 나타나는데 바로 마을만들기의 시작임. 기존 농촌 정책의 큰 핵심은 농업 기반 확충에 있었음. 이후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환됨. 하지만 마을만들기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상향식 공모제를 강조하면서 시작된 사업은 주민의 역량을 필요하기 때문임. 주민들은 필요한 역량과 경험이 없는 상태로 시작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함
- 이후 여러 비판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4년에 추진과정 자체를 제도화 시킨 권역단위농촌마을종합사업이 도입됨. 농촌마을종합사업은 시스템을 제도화시키면서 역량강화를 반드시 포함하게 했지만 행정 및 컨설팅 업체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주도성을 갖추는데 실패함. 이후 2010년에 포괄보조사업이 도입되면서 읍면 단위 사업으로 전환됨. 이런 흐름 속에서 중앙에서는 ‘농촌협약’으로 지역 단위 포괄보조방식으로 예산을 배부하려 하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름. 마을과 읍면에서 서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부처별로 사업별로 구분되어 융합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생활여건은 개선되기 어려움.
- 충남형 마을만들기를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사업화를 제안함. 파일럿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사업이 본 사업으로 가능할지 개척 사업을 진행 하는 것임. 실험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 후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공모 양식을 간소화해서 참여 의지만 갖도록 함. 선정 과정을 통해 협약 방식으로 진행하며, 첫 해는 5년 동안 계획을 짜고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함. 다만 작성에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발표 “충남 민선8기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제안 의견 취합 결과 공유”

#### - 정석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주민주도로 농촌마을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 대상으로 신규사업 제안을 요청함. 도민의 농촌 마을만들기 관심도 증가를 유도하고 시군 센터 주도로 좌담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목적임
- 제안 분야는 충남도 농촌 마을 및 외부 지원 관련하여 ①기존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②농촌(행정리)마을에 대한 지원, ③농촌마을 외부 지원방안, ④농촌마을 정책의 선순화 체계 구축, ⑤기타 자유로운 제안으로 구분함.

- 일반 도민 4건, 시군 중간지원조직 및 단체 5건이 접수됨. 제안 분야별로 ②농촌마을지원 총 6건, ①기존 사업 개선 총 1건이며 중복 분류된 내용도 존재함. 접수된 제안 사업을 보면 제안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개별 마을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 것이 있음. 또한 기존 사업을 타 시군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하였으며, 중앙정부나 충남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제안한 것도 있었음

## ○ 쟁점토론 “민선8기의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어떻게 갈 것인가?”

- 좌장: 장우석 센터장(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 충남 농촌마을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 충남은 3농 혁신으로 다져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경험의 뿌리가 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체계를 흡수함. 이러한 시스템은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 제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 등 충남의 정책방향과 발맞추기 위한 노력에 큰 역할을 함
- 마을만들기를 진행하며 지금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고 함께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것이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등의 가치를 확인 할 수 있음.
-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충남의 성과는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이 선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임. 하지만 좀 더 혁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존재함. 시스템 구축이 너무 잘 되어있다 보니 현실에 안주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 민선8기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 지방이양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과도기적 시기를 맞이한바 있으며 충남도는 이런 혼란 과정에서도 시군의 자유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하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지역적으로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과제 발굴이 필요하며 우리만의 농촌다움을 어떻게 유지보존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남아있음
- 마을사업을 진행하며 필연적으로 정의하는 마을 규약에 ‘주민’의 정의를 폭넓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주민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농촌의 이미지를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부 지원체계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임. 특히 고령화된 사회에서 주민 내부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임. 읍면 단위까지 실효 조직들이 만들어져 밀착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
- 도시에서 하고 있는 주민의 개념(생활권, 관계인구)을 포함하여 정의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사업 및 공동체활성화 등 활동에서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함. 내부 동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민들끼리 뭉치

는 행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함

-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속에서 학습, 소통 창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부에서 오는 귀농귀촌인도 마을의 주체로서 받아들이고 마을만들기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주민주도성이 강화될 수 있는 행정보조사업의 개선 방안

- 최근 지자체에서 농촌협약에 관심이 클 것으로 봄. 왜 이런 협약 방식이 도입되었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함. 정책을 주민주도적으로 활용해야하는데 반대로 선정을 위해 욕구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음
- 기존 방식에 대한 평가에 많은 토론이 필요함. 가장 큰 애로사항은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되고 파악된 문제점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만 행정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음. 결국 많은 구성원들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고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해야할 필요가 있음
- 농촌협약 도입이라는 취지와 현실과의 괴리가 있음. 이러한 괴리가 생긴 2가지 측면을 살펴보면 **첫 번째**, 선정 가능한 사업의 범위(주민들이 하고싶은 범위)를 훨씬 더 넓혀줬어야 함. 농식품부가 제도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임. 부처별 협의를 체계화해서 사업 수행 영역을 넓히는 정비가 필요함. **두 번째**,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에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함. 지자체는 계획 수립의 근거가 필요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을 주자니 범위를 더 넓혀야 하는데 기재부의 설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음. 지원센터가 좀더 방법론을 개선하거나 작은 예산으로 간단한 계획서를 만드는 등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자리와 경험을 더 많이 만들어야함. 또한 주민주도로 마을 단위에서부터 읍면단위로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함

■ 마을만들기의 새롭고 혁신적인 신규사업 제안

- 마을이 단계별 사업에 다가가려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상 지속적인 지원은 불가능함.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안으로 사업 성격을 고려한 사업비 지원 체계 수립을 제안함. 활동가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여 계속사업과 비계속사업의 분리 교부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충남형마을만들기 사업에도 평가지표를 지역 특성에 맞는 지표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행정, 중간지원조직, 마을주민 등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음. 하지만 각자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고, 행정 역시 같은 상황임. 상황을 바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의 관점에 대한 문제임. 상향식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의사 결정을 하는 것과 누가 실행을 할 것인가 두 가지로 구분해야함. 읍면 단위 실행조직(로컬액션그룹)을 발굴하여 역량강화를 통해 실행주체로 활용하고, 읍면 단위의 대표성이 있는 협의